

## 언론인 어제와 오늘

강용삼

전 한라일보 편집국장 중재위원

제주가 낳은 초창기 언론인 송산 김명식은 민족주의자로, 또는 독립운동가로 많은 일화를 남긴 이 땅의 선각자였다. 일본 와세다대학 출신으로 언론계에 몸담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역임하고 매일신보 주필을 거치면서 언론창달에 앞장섰던 그는 월남 이상재가 이끄는 신간회 등의 간부로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오로지 국권회복을 위해 일신을 불살랐다. 1922년 1월 매일신보 신생활(新生活) 필화사건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언도공판이 내려질 때 김명식은 일본의 재판장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2천만 우리동포 중에 마음속으로 일본의 통치를 원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나라는 망해도 민족의 혈맥은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족의 혼과 정기를 살리기 위해 언론인의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1년 6월의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김명식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전국을 돌며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수배와 피신, 투옥과 석방을 거듭하면서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민족혼을 토해내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러나 김명식은 저들의 흑독한 고문으로 말미암아 1941년 가을 함흥형무소에 출감하였을 때에는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다. 글을 못쓰게 손목을 짓이겨 난도질하고 말을 못하게 혀를 자르는 몸서리치는 만행을 당한 것이다. 언론인의 금지와 명예를 목숨으로 지키고 언론인의 이름으로 순절했던 것이다. 시대가 다르고 지향점이 판이한 오늘의 현실에서 굳이 한 선각자가 걸었던 고난의 길을 반추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를 밑거름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언론이 과연 선대의 유훈을 정신사면에서 얼마나 계승하고 투영하고 있는가를 다소나마 짚어보아야 한다는 일말의 충정이 있기 때문이다. 국권회복이라는 대명제가 있었기에 동아, 조선으로 상징되는 일제치하의 언론인들은 한결같은 지사형이 그 주류를 이루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러한 토양과 기개는 해방후의 혼란기와 6·25를 거치고 자유당 독재가 종말을 고하는 4·19 학생혁명 때까지 그 전통을 유지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5·16 주동세력에 의한 언론인 길들이기는 정의·인도·도덕·민주 등으로 표현되는 언론의 본영을 왜곡시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하나의 계기를 조성하고 말았다. 언론은 곧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의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정론을 주창하는 언론인의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올바른 비판력과 보도기능은 서릿발 같은 군사정권하에서는 맥을 쓸 수 없었다. 비중있는 언론인들이 차출되어 권력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출세지향, 권력지향의 현실주의가 언론계를 넘나들었다. 살아남기 위한 수단은 곧 권부와의 타협과 다름아니었다. 언론인에 대한 순치작업은 순종주의, 복종주의, 권위주의 등을 낳으면서 한 시대의 명암을 엿갈리게 했다. 특히 지방지일수록 길들여진 보도내용만이 지면을 채우다시피 했다. 경영의 핵심 광고가 간섭되고 교언영색의 빛나간 제작태도가 적어도 80년대 후반까지는 보편적인 상식인양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대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90년을 전후하여 움트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일부 경영주들에 의한 자사 기자 길들이기 작업이 과거 군사정권의 수법 그대로 답습된 것이 그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생 언론사는 물론 적어도 몇 십년 이상 지방에 군림해 온 기존 언론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행태는 비슷했다. 한정된 광고시장과 독자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지면을 늘리고 최첨단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이에 따른 운영비가 증폭된 점을 들어 기자도 경영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가 판을 친 것이다. 편집과 경영의 이원화는 말이 좋아 명분이지 현실적으로는 먹혀들 수 없는 한갓 냇두리에 불과했다. 새 풍속도가 이러다 보니 사세가 빈약한 지방지일수록 경영에 협조하지 않은 기자는 오래 견뎌낼 재간이 없었다. 아니 바른 말하고 진실에 입각한 참언론인은 설 자리가 없었다. 경영주에 순치된 자만이 살아남았다. 어느덧 지사형은 자취를 감추고 글자깨나 쓰는 필생만이 언론에 존재한다는 비아냥거림이 시민사회에서 떠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언론이란 직업에 매료되어 새로 들어오는 초입기자들이 선배들이 하는대로 무의식 중에 순치되어 경영주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진실과 양심과 기개를 움추린다는 사실이다. 정론을 펴기 위한 언론인 본연의 사명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말미암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뽕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될 만큼 세상은 많이 변했다. 다원화 · 정보화시대에 충족하기 위한 언론의 사명이 환기되는 것은 마땅한 시대의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진다는 명분아래 선거때마다 편파보도로 말썽을 일으키고 특정집단, 특정계층의 비위를 맞추면서 서민의 애환을 등한시한다는 독자들의 비판은 오늘의 언론종사자들이 되새겨야 할 대목일 것이다. 되지도 않은 전망을 멋대로 재단하여 상대방에 치명타를 주거나 심지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연설회 청중의 사진을 조작하는 따위의 저질성으로는 이제 속아 넘어갈 국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동선 추구를 위한 보도 및 평론의 혼선과 광고주에만 매달리는 PR 지면, 지나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제작 태도 등은 선의의 경쟁차원에서도 재고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초창기 언론의 선각자처럼 신명을 바쳐 정의와 민주를 외치라는 주문은 애시 당초 현실에 맞지않은 이단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한대의 주어진 언론자유에는 반듯이 책임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만은 독자의 입장에서 환기시키고 싶다. 언론은 곧 그 시대의 거울이며 역사의 기록자이기 때문이다. 시대정신과 역사 의식에 눈뜨지 못하는 언론은 정보를 알리는 하나의 매체일 뿐 국민의 진정한 동반자가 아니다. 현정파사, 권선징악, 역강부약이란 대원칙은 동서고금을 통한 언론의 본령으로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과옥조일 것이다.